Social Innovation Monitor

사회적 가치의 다차원적 구조

March | 2018 | Vol.15

ISSN : 2465-8960

박명규

사회적가치연구원

Social Innovation Monitor 시리즈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1] 사회적 혁신 생태계 3.0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2]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량 강화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3] 사회 발전과 사회적 가치 평가의 프레임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4] 네트워크 사회의 등장은 공유경제를 촉진시키나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5] 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혁신 조사연구인가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6] 가치창출 분석틀로 본 사회적기업 2.0의 정책과제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7]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8] 사회적 기업 설립의 영향요인 분석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9] 건강한 사회발전을 위한 인간이해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10] 사회적 기업 지원의 딜레마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11] 한국 사회문제 지도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12] 사회적 기업과 사회문제 미스매치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13] 사회문제 지도로 사회적 기업의 미래를 그리다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14] 기업역할과 기업신뢰,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Social Innovation Monitor

사회적 가치의 다차원적 구조

저자

박명규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

contents

• Social Innovation Monitor 소개 —— 5
• 사회적 가치의 다차원적 구조 —— 6
• 참고문헌 —— 35

Social Innovation Monitor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주관하는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을 소개한다. 그 열다섯 번째 주제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명규 교수가 집필한 『사회적 가치의 다차원적 구조』이다. 이는 2018년 5월 저서로 출간될 박명규 · 이재열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하여〉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2018년 3월 2일, '1st CSES(Center for Social Entrepreneurship Studies, 사회적가치연구원) Round Table' 에서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안전과 일자리', '역능성과 혁신', '공동체와 공공성', '상생과 지속가능성' 으로 구체화하고, 이의 실행 주체 및 영역을 사회적 경제 조직,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 기업, 재단, 시민단체, 학교, 종교단체로까지 확장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타주의, 선행, 배려 등의 가치 뿐 아니라, 시장주의 성향의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조직의 존재 이유가 각기 다른 사회적 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협치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다수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교육개혁 및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던 사회적 가치에 관한 논의들을 구체화시키고, 기업,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교 등으로 사회적 가치의 실행 주체를 폭넓게 바라봤다는 점, 그리고 상충적 가치의 모순적 결합, 창의적 융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등 사회적 가치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높다.

사회적 가치의 다차원적 구조

1. 들어가며

21세기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 질 것인가? 한국사회는 안전하고 공정하며 계층상승이 가능하게 될까? 인류는 더 조화로운 지구공동체로 나아갈 것인가? 절실한 질문이지만 그 대답은 불확실하다. 인공지능과 우주정복의 기술을 자랑하고 일상의 풍요는 확대되지만 생태학적 재앙과 문명 간의 충돌, 집단간의 갈등을 해결할 역량은 불충분하다. 양극화와 일자리의 감소, 혁신역량의 침체와 같은 사회문제도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가의 개입과 시장의 효율성이 해결책이 되리라 기대하기도 어려워졌다. 한마디로 시장의 한계와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혁신적 대응책을 찾아내는 일이 중대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한 국내외의 여러 논의들은 시장과 국가와는 구별되는 사회의 역할에 주목한다. 다소 도식적으로 말하면 경제와 정치로 얻어지지 않는 새로운 방식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기획을 표방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통합,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이라는 접두어를 붙인 정책적 제안이나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이 이런 경향을 잘 드러낸다. '사회적 가치' 는 이러한 논의들의 내용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다. 현재의 국가체제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작동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기존의 사고방식, 행동유형, 우선순위의 근본적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사회적 가치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와 공공기관 혁신의 노력도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기업 역시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가치는 특정한 행동이 바람직한지, 목표로 삼을 만한지, 성공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데 기준이 되는 핵심적 요소로서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장차 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지도 그 사회의 가치체계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묻는 일은 현안이 되고 있는 사회문제들의 해결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방향설정에도 중대한 함의가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 가치를 핵심요소, 실천영역, 수행주체의 차원에서 체계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천에 적합한 다차원적 접근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지적 작업이다.

2. 사회적 가치의 핵심내용

사회적 가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명료하게 정의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다.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여 시대적 화두가 되었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아젠다로서 광범위하게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학계 내부의 논의가 잘 정리되지는 못한 개념이다. 다만 현재의 자본주의 작동 방식을 혁신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치체계를 비롯한 포괄적인 대안모색이 절실하다는 명확한 문제의식이 이 개념을 주시하게 만든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에는 연역적이고 이론적인 접근보다 귀납적인 아젠다 정리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동안 인류가 봉착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했던 몇 개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이것을 네 개의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사회적 가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20세기 후반 이래, 특히 탈냉전을 거치면서 세계화된 자본주의 발전모델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노력들을 하게 되었다. 전례없는 다양한 문제와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첫째로 유엔은 로마선언 이래로 지구공동체의 미래를 염려하고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을 재고할 것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온 대표적 기구다. 21세기에 들어서 유엔은 지속가능발전을 새로운 화두로 제시했고 2015년 9월에는 이의 17개 목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빈곤종식, 영양, 건강과 웰빙, 형평성 있는 교육, 성평등, 위생, 에너지, 일자리, 인프라, 불평등해소, 주거, 지속가능경제, 기후변화, 종다양성, 생태계보호, 법치, 글로벌 파트너쉽 등이 포함된다. 둘째로 영국은 2012년 공공서비스법을 제정하여 공공구매 방식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이 법을 사회적가치법이라고 병기하고 있는데서 보듯, 영국의 노력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사회적 가치실현의 과제와 연결시키려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로 한국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가치기본법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로 인권, 안전, 건강, 노동권, 사회적 약자보호, 상

생과 협력, 일자리 창출, 공동체 복원, 지역경제 공헌,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등 총 13개를 열거하고 있다. 넷째로 EU 차원의 '사회적 질' 선언은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의 네 영역을 강조한다. 사회경제적 안정성에서는 재정적 안정, 고용, 주거, 건강, 교육, 가족, 여가 등이 포함되며 사회적 포용성에는 시민권, 노동시장참여, 공적 · 사적 서비스 혜택, 사회적 접촉이 포함된다. 사회적 응집성에는 신뢰, 공통된 규칙과 가치, 사회적 관계, 정체성 등이 포함되고 사회적 역능성에서는 지식 접근성, 노동시장 참여, 개방성과 제도적 지원, 사적 관계 등이 포함된다. 이상의 사례들에 포함된 다양한 가치요소들을 재구성하면 다음 네가지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1) 안전과 일자리

사회적 가치의 일차적 내용은 안전의 확보다. 안전은 현대사회가 초래하고 있는 각종 위협과 재난으로부터 개인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을 가리킨다. 빈곤과 기아로부터의 해방, 전쟁과 탄압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패, 실직, 무주택, 질병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안전의 기본요소다. 삶의 안전을 해치는 이러한 위협은 개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사회정치적 조건과 잘못된 정책의 산물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그 해결책도 사회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네 사례들에서는 대체로 기존발전모델이 안전을 보장하는데 미흡할 뿐 아니라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본다. 환경재난, 불평등, 실직, 사회적 배제 등은 모두 근대 이후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상으로서 오늘날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근대적인 요인들이다.

사회적 가치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삶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선 환경파괴로 인한 생태학적 재난의 영향으로 인류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최우선의 가치다. 성장중심적인 발전정책의 결과 지구의 환경은 상당히 훼손되었고 자원고갈과 기후변화 같은 환경재앙을 맞고 있다. 기술발전이나 대도시화, 고에너지 생활양식 역시 환경과의 조응을 고려하지 않을 때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활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또한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빈곤층의 재생산은 하층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부의 배분이 편향되고 불균등한 발전이 가속되면 사회적 약자의 안전은 결정적으로 훼손되기 때문에 균형성장, 부의 재분배, 빈곤층 보호가 사회적 가치와 밀접한 사안들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가장 강조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일은 단순히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에 그치지 않고 한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생활의 장이어서 실직은 단지 안전의 위협일 뿐 아니라 삶 자체의 위협이 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이 각자 적절한 일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의 최우선적 목표가 된다. 특히 디지털화로 인해 노동의 미래에 전례없는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적절한 일을 갖고 삶의 의미와 존재감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ILO, OECD 등이 모두 '노동의 미래' 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독일이 '산업 4.0, 노동 4.0' 체제를 구축하고자 애쓰는 것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지구적 인구이동과 다원화의 상황에서 사회구성원 일부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권의 유연한 보장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가치에 해당한다. 사회적 배제나 소수자 억압과 같은 현상을 없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2) 역능성과 혁신

사회적 가치는 표준화되거나 항목화되어 행정적으로 주입되는 어떤 요소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지니는 고유한 개성, 능력, 품성, 존엄이 실현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가치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존중하고 이것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상태를 지향한다. 사회적 가치는 상품화되거나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숙한 도덕교육의 훈련지침으로 표준화될 수도 없다. 오히려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것을 실현하고 존중하면서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때 실현되는 집합적 재화다. 이런 점에서 역능성의 존중은 단지 개인의 존엄을 인정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혁신을 가능케 하는 자산이 된다. 혁신은 개성적 조합, 자율적 단합, 이질적 통합, 유기적 연대와 같이 개인적 특수함이 집단적 속성과 공존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는 창의적 환경이 주어질 때 가능한 속성이기 때문이다.

기존가치나 규범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순응하는 모범생을 키우는 교육만으로는 혁신의 동학이 생기지 않는다. 혁신은 개인이나 조직을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조직하고 만들어내는 역능적 행위자로 간주하는 데서 가능해진다. 행위자성을 강조하는 것은 보편적 규범의 내면화보다 사회 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닌 주체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다. 더구나 다양한 가치의 혼재, 상이한 요소들의 긴장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역능적 행위자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가치, 모순적 지향들을 함께 융합하고 이를 통합시켜낼 역량이 중시된다.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적으로 추구하며 발전과 정의를 양립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무가치와 사회가치의 상호성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역능성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한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네트워크, 연결재의 확대, 빅데이터의 사회화 조건이 시민적 역능성을 확대하고 협력을 통해 융합가치를 실현하고 분산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긍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에 해당한다. 데이터가 집적되고 초연결사회의 정보인프라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결재가 공공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치들 역시 필요하다. 그럴 때 개성적이고 다양한 실험과 실천들이 혁신의 자산

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공동체와 공공성

사회적 가치의 핵심 내용의 하나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이다. 개성과 자율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경쟁적 타자, 사회적 약자, 문화적 소수자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포용하려는 지향을 가진다.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이 각자도생의 소외지대로 내몰리지 않게 하고 정서적 좌절감, 분노와 공격성, 아노미와 혐오정서가 배태되지 않도록 공감과 정체감을 강화하는 것도 사회적 가치의 중요한 요소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지나치게 시장중심, 금융자본중심으로 달려온 현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화와 기술혁신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도시와 농촌 사이에, 고이윤 직종과 재래식 직업군 사이에 격차를 점점 더 벌여놓았다. 이 과정에서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 뒤처진 지역들, 소수자들의 불만과 좌절은 누적되고 있고 이들을 체제 내로 통합시킬 문화심리적 역량이 줄어들고 있다.[1]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이런 현실을 전환시키고 대안적인 조율기제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사회적 가치는 이를 위해 공공성을 중시한다. 공공성의 내용은 공적인 것(res publica), 공익성(public interest)과 공공재(public goods) 공급, 공론성(offentlichkeit, public sphere), 공정성(fairness)과 공평성(impartiality), 공개성(publicity)과 공표성(openness), 공유성(public sharing)과 공공복지(public welfare)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지만 그 핵심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중시하는 것이다. 당연히 참여하는 공민(public citizen), 정부적인 것 또는 국가적인 것(official, governmental), 정치적인 것(political),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을 가진 시민결사체(civil association) 등의 역할이 중시된다(임혁백, 2015). 국가의 감독 아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를 공공기관이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일반 다수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사업을 공공사업 또는 공공복지라 부르는 어법에서도 드러나듯이 공익과 공적 기관이 수행하는, 또는 수행해야 하는 공적인 지향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공공성은 기본적으로 공직자, 국가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투명한 일처리, 공적 헌신,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서의 자의식 등을 그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공공성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차원의 연대와 배려의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사회학자들이 지적하듯 타자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고 같은 시대를 사는 동반자로서의 연대감이 없으면 사회는 존속할 수가 없다. 뒤르켐은 사회가 다양해지고 이질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이질성을 기초로 하는 상호의존으로 인해 공동체적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공생의 가치가 소멸되고 각자도생의 비정한 사회를 직면하게 된 것은 국가와 시장의 실패와 함께 공동체의 약화로 인한 연대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사회적' 노력들이 공동체와 연대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월가의 시위대가 사용했던 어휘를 활용해서 표현한다면 "이윤보다 사람을, 기업의 이기적 이익보다 정의를, 억압보다 평등을 우선시" 하는 마음, 제도, 정책, 환경을 창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곧 사회적 가치의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이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도 중요한 관심자원이다. 사회적 자본은 계량화되기 어렵고 또 돈으로 구매되는 것도 아니지만 공동체 차원의 연대와 통합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협력과 공감을 가능케 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후쿠야마는 이러한 자발적 협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가치로서 신뢰(trust)를 주목했다. 후쿠야마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고신뢰사회일수록 자발적 사회성, 강한 공동체적 연대가 가능하고 따라서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시키고 각종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인간이란 '합리적 실익극대화' 를 지향하는 이기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공동체 내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에 기초하여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는, 즉 신뢰를 지향하는 존재이기도하다. 신뢰가 존재할 때 상호호혜와 협력이 촉진되어 공동체가 물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민주주의의 성장, 복지제도의 발전, 시민사회의 역동성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뢰와 함께 배려, 협력, 공유 등의 가치가 사회적 양극화나 소외의 문제가 심화되는 곳에서 연대와 통합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처럼 가치체계의 동질화를 초래한 기존의 근대화 방식을 성찰하면서 배려, 협력, 신뢰의 가치를 복원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가 지향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4) 상생과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는 결국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과 친화력을 가진다. 상생의 가치는 남을 살리는 일일 뿐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타자 및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선행과 자선이 아니라 정책과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적자본의 강화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무분별한 사유화의 흐름에 집착하는 성장중심 발전모델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국민총생산 지표로 대표되는 물량 위주의 발전전략은 심각한 환경파괴와 오염, 자원의 고갈, 기후의 변화, 문화다양성의 악화로 지구공동체의 상생 조건을 크게 위태롭게 만들었다. 기업의 성공은 이윤창출의 규모와 동일시되면서 시장은 통제되지 않은 채 물질적 욕망, 사유화의 욕심을 극대화시켰다. 상생의 가치, 타자에 대한 배려가 급격히 약화되고 그 부정적 결과는 공동체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이

1) 세계화가 본격화된 지 10년만인 1999년 시애틀에서 거대한 '반세계화 시위' 가 나타난 것이나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난 2009년 맨해튼 금융지구의 한 작은 공원에서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 (OWS · Occupy Wall Street) 운동이 벌어진 것은 탈냉전 이후 세계질서에 대한 반감의 수준과 성격이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월가의 시위는 "다국적기업들에 속았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 을 대상으로 "인류의 미래는 구성원들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 을 강조했다. 문명적인 발전의 상징과도 같던 유럽연합에서도 최근에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과 통합력이 약화되고 종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장벽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인류가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인식, 상호 연결되어 있는 공동운명체로서의 결속감이 현저하게 약화된 시대적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다.

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구조를 전환시켜 상생의 가치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를 다지려는 노력을 중시한다.

지속가능성은 환경오염이나 생태파괴를 방지한다는 자연생태적 문제의식을 넘어서 상생과 절제, 공유와 같은 대안적 생활양식을 꿈꾸는 사회생태적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동시적으로 고려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동체의 자생력을 키우는 공생과 상생의 역량을 강조한다. 또한 초연결사회로 진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인 데이터가 집합재로서 공공의 가치, 상생의 가치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지닌다. 경제-사회-환경의 동적 균형을 지향하면서 상생과 지속적 발전의 미시적 기초가 되는 마을공동체, 농촌공동체, 도시공동체와 같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삶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현장이 각자도생의 경쟁지대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공존할 수 있는 공유인프라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의 중요한 지향이다. 되돌아보면 현대한국이 보여준 성공적인 물질적 발전 자체 역시 숱한 사람들, 조직들, 실천들이 함께 작동한 결과다. 한국현대의 역동성은 "서로 상이한 가치의 동시적 작용에서 오는 동적 균형 '에서 얻어진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박명규, 2016). 즉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물질주의와 정신주의, 규율주의와 반규율주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등이 독특한 방식으로 공존하게 된 구조적 특성이야말로 한국현대의 성공적 변화를 이끈 동인이다. 이러한 ' 동적 균형 '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 역시 사회적 가치의 소중한 내용이 된다.

3. 사회적 가치의 실행영역

사회적 가치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 개념이라기보다 바람직한 가치를 구현하려는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함의가 강하게 내포된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프로그램, 영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다 풍부해질 수 있다. 한국의 국회에서 논의중인 사회적가치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 · 경제 · 환경 ·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로 정의하고 있는 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 하는 활동 전반이 포함된다. 이런 포괄적인 이해는 사회적 가치의 핵심을 밝히는데 는 다소 어려움을 주지만 사회적 가치의 실천영역들이 다양하고 포괄적임을 보여주는 장점도 없지 않다. 대체로 네 개의 실행영역이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고려되고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1)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지식을 생산하는 경제영역을 의미한다. 사회적 경제는 상호배려의 정신을 강조하는 호혜성의 원리와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함께 작동하는 경제(Karl Polany)이고, '이윤보다 서비스를 우선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갖고 수익배분에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우선시 하는 경제' (Defoumy and Develtere)로 설명되기도 한다. EU는 자본투자자의 이익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제를, ILO는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여 연대를 깊게 하면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 지식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조직이며 주로 협동조합, 공제회, 결사체, 재단, 사회적 기업으로 대표되는 경제를 사회적 경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정의가 사용되는데 장원봉은 "자본과 권력을 핵심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인 자원분배를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세계의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방식" 이라고 했다. 김의영 외(2016)는 사회적 경제를 명확하게 개념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공공/민간, 영리/비영리, 공식/비공식의 세 축에서 서로 융합되고 혼종되는 복합적 영역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민주성, 경제성, 사회성이 맞물리면서 mapping 되는 다원적인 장을 사회적 경제로 파악하고자 했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행위이면서 그 목적이 경제적 가치추구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특징 때문에 가능성과 어려움을 함께 지닌다. 먼저 가능성의 차원에서 보자면 사회적 경제는 연대의 창출, 이타적 협력, 호혜적 도움을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담 스미스가 바랐던 '공감의 범위 내에서의 이기주의' 를 실현할 수도 있고 경제적 욕구충족과 더불어 적절한 사회적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선행위보다 지속가능성이 높은 점도 장점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라는 활동영역이 제도화됨으로써 개인별로 흩어져 있던 고립된 선의지, 잠재적 이타심을 가시적인 형태로 활성화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이기적이지 않으며 일정정도의 이타적 배려와 공적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사회적으로 실현할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경제는 다수의 선의지들을 결집하여 공공의 선의지를 결집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수 있다. 유럽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Europe)가 사회적 경제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은 이런 기대를 담고 있다(고동현 외, 2016: 62-63).

-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보다 우선한다.
- 구성원 자격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 구성원 및 이용자의 이익, 기타 보편적 이익 등을 고루 안배해야 한다.
- 연대와 책임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 잉여의 대부분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구성원의 이익과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상의 원칙들 속에서 발견하는 핵심가치는 사람중심, 민주성, 자발성, 연대와 책임,보편적 이익, 자율성 등이다. 이런 가치들을 경제활동과 더불어 구현하겠다는 포부가 사회적 경제에 담겨있다. 사회적 경제는 추구하는 목표에서 재무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다. 앞서 언급한 가치들의 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영리추구와 비영리 활동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 경제는 그 내용과 활동을 표준화하거나 특정화하기가 어렵고 내부적으로 많은 실험적인 활동, 일시적인 시도, 유의미한 실패를 지니게 마련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기존의 다른 영역과의 연계, 중첩, 융합이 불가피하다. 사회적 경제는 공식/비공식, 영리/비영리, 공공/민간의 축을 부분적으로 가로지르고 통섭하는 역할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조절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영역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프랑스 등에서 민간영역(제1섹터), 공공영역(제2섹터)와 구별되는 제3섹터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는 이윤창출의 시장영역, 공적 책임의 국가영역, 그리고 상호부조와 자조의 사회 영역이라는 3분법을 반영한다. 다시 말해 프랑스 혁명의 3대가치 가운데 박애의 정신을 제도적으로 실천하는 영역으로 사회적 경제를 위치시키려는 포부이기도 하다. 사회적연대경제(SSE: Social Solidarity Economy)는 한발 더 나가 능동적 시민성에 입각하여 경제행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민주화시킬 것을 지향하기도 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자본주의와 국가주도 경제와는 다른 대안적 경제를 구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강조했다. 즉 일반인이 경제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둘째는 인본주의, 연대, 상호부조 ,협동, 호혜성, 민주주의 등의 가치에 기초한 윤리적 발전을 추구하며, 셋째 공동소유를 지향하고 넷째, 사회적 약자들의 역량강화를 중시하고 다섯째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민간조직 등과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며 협력한다는 것이다(고동현 외, 2016: 66-67). 이처럼 체계적이지 않더라도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다양한 실천, 중첩적인 활동영역을 포괄적으로 가리킬 때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이 늘 중심이 된다.

(2) 공공구매와 공공서비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이 자발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가능해지려면 그러한 움직임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존중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결사체나 오래된 사회적 자본이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만 강력한 경쟁논리로 무장한 현실 자본주의의 힘 앞에서 사회적 가치의 자발적 실현이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 이 점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주목하게 된다. 정부는 구성원 모두의 복지와 안녕을 공적 책무로 지닌 만큼 헌법 원리상으로도 민주적이고 호혜적이며 공동체 지향을 가진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친화적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영역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방식은 공공조달의 구매력과 지역사회 영향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다. 이를 '공공서비스' 또는 '사회책임조달' 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각종 소요물자의 구매과정에서 경제적 원리보다는 사회적 약자 보호나 균형을 최우선으로 함을 중시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OECD 회원국의 경우 공공조달이 국내총생산의 15%에 달한다는 통계를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비용지출이 갖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공공기관은 최저가구매가 아니라 최적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구매가 가능하다. 또 재정지출에 기초하는 것인 만큼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도 유리하다. 이 부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유럽연합의 경우 1980년대 이래 사회적 경제를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하여 유럽 전체의 아젠다로 수용했다. 1989년 저우간 협의에 필요한 공식 용어로 채택되었고 2002년에는 '사회적경제 유럽헌장' 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고동현 외, 2016: 71; 장원봉, 2007: 16). 2009년에는 미국에서도 사회혁신청이 설치되어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정부차원의 노력을 시작했다. 정부의 공식 의제 속에 사회적 경제가 포함되게 된 것은 사회적 가치 실현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발전과정으로 이해된다.

영국이 2012년 제정한 '공공서비스법(사회적가치법)' 이 이 부문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실천사례라 할 만하다. 영국은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를 수행할 때 반드시 '커뮤니티' 에 미칠 여러 효과를 고려할 것을 규정했다. 이 법은 소수자보호나 공동체 통합과 같은 '사회적 가치' 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시민사회와 지역사회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공공서비스와 사회적 가치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는 명칭에서도 나타나듯 사회적 가치를 '위탁 및 조달과정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구매와 그에 따른 결과 이상으로 창출되는 공동체를 위한 편익' 으로 규정한다(Boeger, 2017). 다시 말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들의 공공서비스 활동에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소수자 및 장애자들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 지역경제의 인프라 제공 등을 고려하게 만드는 것을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차원에 중점을 둔 활동들이 종종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집단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커뮤니티의 통합, 주민의 참여, 지역 차원의 책임성과 안전 강화 등의 가치를 포함하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다. 한국에서도 2014년 6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 을 발의했고 2016년 8월 김경수 의원이 다시 대표 발의하여 현재 논의중인 법안 역시 공공기관 주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이것은 정부, 지방자치단

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영국의 공공서비스법의 성격과 유사하다. 서울시 역시 공공기관의 구매와 관련하여 2013년 2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계약방안'을 추진하였다. 서울시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58개의 지표 초안을 마련하였고 다시 이것을 25개의 지표로 정리했다. 이 중에는 노사간 상생협력문화구축, 가족친화문화 조성, 장애인 권익보호, 근로자 고용안정, 노동착취근절, 공정경쟁 실시, 동반성장 활동, 소비자 불만 및 분쟁해결,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다.

(3) 사회적 책임, 사회적 공헌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민간부문, 특히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은 이제 CSR이라는 개념이 독자적인 프로그램, 경영원리로 자리잡을 정도까지 일반화 되었다. 자본주의 4.0을 주장하는 논의에서도 이 말은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개념이 쓰인 역사는 1953년 보웬의 동종의 책자로부터 기산하면 60년 가까이 흘렀다. 간헐적으로 경영학과 법학 등에서 이 말이 사용되었지만 1990년대까지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 말이 급부상하고 유행어처럼 된 것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인데 크게 세가지 요인이 지적된다. 하나는 탈냉전 이후 세계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거대화인데 기업활동이 한 국가나 지역사회로부터 이탈하여 독자적인 존립기반을 갖게 된 것이다.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정책적 효과가 약화되고 오히려 전지구적으로 움직이는 금융자본의 흐름에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를 겪게 되었다. 두 번째는 1999년 시애틀 반세계화시위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한 반기업정서의 확산이다. 시애틀의 반세계화 운동과 '월가를 점령하라'를 외친 격렬한 시위는 세계화 이후 엄청난 부를 축적해 오면서도 사회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책임감을 강하게 지니지 않는 제1섹터 주체들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표현한 것이었다(정한울, 2015). 세 번째는 유엔과 국제기구 중심으로 인류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준과 책임성의 강조를 들 수 있는데, OECD는 2000년에 글로벌기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했고 ISO는 ISO 2000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규범과 원칙을 확산시켰다. 유엔은 2000년에 글로벌임팩트를 발효시켰고 이런 흐름과 보조를 맞추어 유럽연합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여러 논의와 실험들이 진행되었다(정재관, 2015: 23-2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CSR의 구체적 내용은 사회와 기업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럽에서는 환경가치의 보호가 가장 중요한 책임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지만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그것은 부차적이거나 정부의 몫으로 간주된다. 실업이나 고용불안,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도 전적인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는 관점과 기업의 주요 책임의 하나라고 보는 관점이 혼재한다.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 약자보호의 기능도 어디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는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방향과 추세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점차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즉 기업가의 선행이나 자선, 시혜의 차원에서 인식되던 사회공헌이 이제는 공정무역, 고용안정, 인권보호, 다양성 강화와 같은 공동체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존재이유를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양 측면에서 찾으면서 환경, 빈곤, 교육, 보건, 지역사회 등에 대한 공헌까지 사회적 책임의 내용으로 포섭해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과 법인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공헌'이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공헌을 책임진 부서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단순한 자선사업이나 시혜적인 선행이 아니라 기업의 고유역할, 핵심활동의 하나로 점차 중시되고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접어들어 전세계적으로 거대기업의 사회공헌, 이를 위한 공익재단 출현 등은 활발하다. 한국의 경우도 2011년에 225개사 사회공헌지출 총액이 3조 889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책임론을 넘어서 가치창출의 전략적 대응으로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이 주장되기도 한다.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양립가능할 뿐 아니라 양자가 공유될 때 오히려 기업경영이 더욱 혁신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포터와 크레이머가 2011년 "하바드 비즈니스리뷰'에 실은 "공유가치 창출"에 관한 논문은 부제를 "자본주의의 재건 및 혁신과 성장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하여"라고 달았다. 공유가치의 창출이 자본주의의 재건과 혁신을 목표로 하는 것임을 드러낸 것인데 이 글에서 필자들은 공유가치를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공동체 안에서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들을 함께 발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과 운영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기업의 가치는 자선과 같은 윤리적이거나 이윤창출 같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핵심목표 속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포함하는 것이다(Poter & Kramer, 2011: 26-27). 이런 점에서 이들은 세가지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첫째는 '피라미드의 지층'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해 내는 것으로 저소득층, 빈곤국, 빈곤층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영역을 찾아내는 것이다. 둘째는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노동과 자원을 결합하는 방식을 생산성 제고와 사회적 문제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쪽으로 재정의하는 노력이다. 셋째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혁신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지역 클러스터 형성을 꾀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고용불안과 양극화라는 사회문제의 해결에는 그다지 가시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반기업정서도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가치 중시노력은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와 함께 주요한 실천모델로 앞으로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4) 사회혁신과 시민적 역능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 사회의 구성원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과 실천력을 강화하도록 문화와 제도, 생활양식을 혁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혁신이 중요한 실천과제로 대두된다. 슘페터 이래로 혁신의 개념은 주로 기술혁신과 기업혁신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고 따라서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는 함의가 강했다. 생산성의 증대와 효율성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술과 제도, 사회적 관행을 전환하는 것을 혁신의 내용으로 간주해왔다. 예컨대 송위진(2014)은 사회혁신을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머튼과 같은 사회학자들은 혁신을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행위자의 독특한 행위유형으로 고찰하면서 한 사회에 공존하는 여러 가치요소와 관행화된 방식 사이의 불일치, 갈등, 긴장과 모순 속에서 출현하는 반응양식의 하나로 설명한다. 이 점에서 '사회혁신이란 넓은 의미에서 기존의 아이디어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목적과 요구를 달성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변화를 이끄는 활동"으로 정의한 멀간(Mulgan)의 관점과 머튼의 시각은 접맥될 수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사회혁신을 "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품, 서비스, 모델 등을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협력을 창출해 내는 것"으로 정의했는데, 여기서는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전체의 시스템, 상호관계 방식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조직의 경우 전형적인 기업경영조직과는 다른 의사결정, 고용방식, 소통형태와 권리책임의식 등이 요구되며 문화적으로도 권위주의나 서열의식, 집단편견이나 사회적 배제를 축소시키는 조치들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오랫동안 내면화되었고 지금도 위세를 떨치고 있는 비용/효과를 대비하는 효율주의, 성과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구성원의 자발적 협력, 참여를 통한 역능성의 강화, 숨겨진 아이디어의 발굴, 집합지성의 활성화, 정서적 공감과 행복감 등을 더욱 중시하는 가치서열구조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효율성에서 뒤떨어지고 영리적 전망이 낮은 사회적 경제에서 오히려 혁신의 필요성, 혁신적 심성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유념해 볼 일이다(고동현 외, 2016: 90).

이런 사회혁신은 4차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것이 가져오는 기회와 문제를 주목한다. 전 사회의 디지털화가 초연결사회를 만들어내고 무수한 개인들의 일상적 행위가 빅데이터라는 집합자산으로 자원화하게 되면서 고전적인 위계와 경계를 전제한 의사결정방식이나 갈등해소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분출하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화로 가능해진 사회변화는 전례없는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 참신한 아이디어, 개성적인 발상, 혁신적인 사업아이템, 유연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연결되는 소통구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하다. 사회혁신은 이러한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인프라 구축을 의미한다. 소셜벤처의 역할이나 소셜금융의 등장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혁신적 사례로 꼽을 만하다. 소셜벤처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니즈를 발굴하고 이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시키는 주체가 된다. 소셜금융 역시 이러한 활동들을 뒷받침하고 혁신을 꿈꾸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디지털화로 인해 새로이 창출되는 많은 데이터와 기회들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것이라는 점, 다양한 아이디어와 혁신적 발상으로 누구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소수 대기업의 사유화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할 과제다.

사회혁신은 사회구성원들의 역능성, 자발성, 시민성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사회적 자본과 사회 서비스의 니즈를 연결시키는 것도 주목하게 된다. 사회적 자본은 가족, 지역사회, 종교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신뢰자산을 의미하는데 미시적 생활세계에서 개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불편함, 배려와 공유, 협력의 필요성을 연결시키는 혁신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공공서비스와 별개로 사회서비스는 다양한 돌봄노동, 자원공유, 재능기부의 장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니즈를 종교, 시민단체, 문화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결합시켜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김의영 외, 2016: 153-55). 이 측면에서 전통적인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의 역할에 대해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연고주의나 사적 네트워크는 신뢰를 창출하면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부패의 고리로 작동할 가능성도 높다. 후쿠야마는 동아시아의 가족주의를 저신뢰사회의 특징으로 간주했는데 가족주의는 사회적 충성심보다 가족의 결속을 중시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의 공적인 신뢰를 창출하지 못해 사회전반의 보편적 관심과 참여가 약하고 자발적 공동체의 형성이 취약하여 중간집단이 허약한 특성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다.[2] 이 점에서 신뢰, 코뮤니타스, 연대, 배려, 협력, 공생 등의 가치가 연고주의의 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과 문화, 관행의 개혁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4. 사회적 가치 실현의 주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영역들이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만큼 이를 수행하는 주체도 다양하다. 정부

2) 후쿠야마는 일본의 경우는 개방적 가족주의가, 한국의 경우는 국가가 가족주의의 편협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했다고 보았지만 기본적으로 가족주의적 가치는 친족관계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간의 결속을 약화시켜 사회공동체 전체의 결속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고 이런 연고주의는 결코 신뢰의 기초, 사회적 자산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와 기업, 시민사회도 참여하고 지구적으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 공식적인 조직의 형태로 참여하는 주체가 있는가하면 비공식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규범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주체도 있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더욱 중시하는 주체도 있다. 여기서는 앞서 정리한 틀을 기본으로 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수행주체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차적인 영역은 사회적 경제다. 사회적 경제 자체가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실제로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많은 실천과 실험들이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회적 경제를 수행하는 주체들도 다양한데 EU는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의 특징으로 7가지를 언급했다. 즉 공공섹터에 속하거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적 조직으로, 법적 근거를 가진 공식적 조직이며, 설립과 해산, 조직구조나 활동내용의 결정과 관련하여 완전한 자기결정권이 있고,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며, 수익이나 잉여금 분배에서 조직구성원의 참여나 이용을 중시하고 자본의 축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체로 1인1표의 민주적 운영을 특징으로 한다. ILO는 "협동조합, 공제회, 결사체, 재단, 사회적 기업" 등을 사회적 경제의 핵심주체로 언급했고 드푸르니에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재단 등을 주요한 주체로 보았다. 김의영 외(2016)는 사회적 경제를 담당할 주체와 관련해서 훨씬 포괄적인 조직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물론이고 각종 비영리 법인, 지역자치조직과 자활기업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조직형태는 단일하지 않고 그 활동내용도 다양하지만 이윤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삼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 가운데서도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핵심적 주체로 간주된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인적 결사체"라고 정의된다(김의영 외, 2016: 55).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속에서도 이윤추구의 경제논리와는 다른 상호부조, 협력과 공생의 가치를 고수해온 독특한 조직형태다. 유엔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고 협동조합의 운영방식을 사회적 가치 실현의 주요한 주체로 강조했다. 그 뿌리는 역사적으로 오랜 동업조합, 마을공동체, 자발적 노동조직, 종교문화적 유대 등으로 소급할 수 있는 바, 자본주의 4.0의 장래를 비쳐주는 '오래된 미래'에 값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국에서도 두레공동체나 마을공동체와 같은 전통적 요소가 협동조합의 주요한 근간이 되었다. 2012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지방정부들이 협동조합 진흥정책을 편 탓에 그 수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불가능했던 조직화 방식을 용이하게 변경함으로써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뒷받침했고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협동조합은 조직형태상 혼종성이 뚜렷하고 새로운 역동성을 보여주지만 정부지원이 확대되면서 자율성의 훼손이나 고유의 성격에 변화가 나타날 개연성도 없지 않다. 또한, 생태주의나 종교적인 심성구조, 지역리더십의 존재 등 여러 변수가 함께 갖추어져야 협동조합의 지속성, 책임성, 사회적 가치실현의 효과성 등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에 비해 사회적 기업은 좀 더 경영논리를 수용하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며 공식적인 제도화를 지향한다. 사회적 기업은 상대적으로 탈지역적이고 목적지향적이며 변화하는 현실문제의 해결을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제도화되면서 많은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했고 그에 따라 좀 더 공식화되고 평가를 중시하게 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소수자의 고용,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삼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추구한다. 특히 장애인 고용,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보호 등과 관련한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가시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흐름은 사회적 기업 고유의 가치실현이기도 하지만 정부와 기업의 지원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인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원을 받기 위해 조직운영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높이고 끊임없이 사회적 니즈에 반응하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자칫 사회적 기업 고유의 자발성, 주체성, 민주성을 훼손시킬 수 있음도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 지표화하기 어려운 협력과 신뢰, 공존의 가치가 부차화하고 보조금을 받기 위한 표준화된 조건이 사회적 기업의 활동방향을 정형화하게 되면 본연의 가치지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사회적 기업을 표준화하려 하지 않고 그 다양성과 역동성을 지원하는 유연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사회적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을 좀 더 포괄적이고 가치지향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현재 SORI, BSC, CPI 등이 시도되고 있고 SK에서 실험하고 있는 사회성과 측정체계 개발 노력 역시 중요한 실천의 하나이지만 자칫 사회적 기업을 특정한 틀로 규격화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전형적인 활동방식과는 다른 사회적 투자, 사회적 생산, 사회적 유통에 주목하고 이윤중심 수익률 모델과는 다른 사회투자수익률을 주목함으로써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으로 인한 공공부문의 복지예산 절감,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로 인한 소득세 세수증대, 취약계층 가정의 소득 증대,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로 인한 범죄비용의 절감액 등은 모두 사회적 편익을 구성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부재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종업원 비효율성, 추가적 감독비용, 임금 프리미엄, 낭비, 기부자 관련 행사, 비영리활동 비용 등을 포괄하여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이승규 · 라준영, 2010: 49-50).

(2)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점점 더 커질 수도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는 2010년 '사회책임조달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여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한도 내에서 고용기회, 일자리, 사회권, 노동권, 사회통합, 기회균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실현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독일 역시 '경쟁제한법' 과 산업 4.0, 노동 4.0 기획을 통해 사회적, 환경적, 혁신적 측면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영국은 사회적가치법이라고도 불리는 공공서비스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이 조달하고자 계획하는 바가 관련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복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조달절차의 시행에 있어 복리증진을 위해 해당 당국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를 고려하도록 했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위해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정하여 권고하고 있고 ISO 26000은 세계인권선언, ILO 협약, 기후변화협약, OECD 소비자분쟁해결권고 등을 종합하여 '사회적 책임의 국제이행 지침' 을 제시한 바 있다. 한마디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자발적인 사회단체들에게 맡겨두기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책임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려는 흐름이 뚜렷하다.

한국 정부 역시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을 통해 관련사항에 정부가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제도화하려 한 것은 2014년 문재인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기본법" 이 그 출발이라 하겠다. 이 법안은 2016년 8월 20대 국회에서 다시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2017년 정부의 대안 검토를 거친 후 2017년 10월 박광온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 '사회적가치기본법안' 은 사회적 가치의 정의, 공공기관의 책무와 역할, 기본계획 및 지역별 추진계획, 사회적 가치 위원회, 사회적 가치성과 평가 등 기본적 사항들을 망라하고 있어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종합법안이라 할 만하다.[3] 법안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검토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정부혁신이다. 즉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정책목표가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근본적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와 연결시키고 있다. 공공부분의 정책구상에서 강조되는 사회적 가치는 공공성을 핵심으로 하는데 하위범주로는 공익성, 공정성, 공민성, 공개성의 원칙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혁신을 위해서는 공공-소셜섹터-민간이 협력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쉽, 즉 PSPP(Public Social Private Partnership) 방식의 협치시스템이 제안되고 있고 사회적 가치 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조되는 것은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와의 연관효과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민사회 역량강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등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이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민간위탁 관련법, 민간투자사업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논의된다. 이외에도 환경정책기본법, 근로기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중소기업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국가재정법, 조달사업법, 기금관리법, 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재검토될 수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법제가 그동안 국가주도의 고도성장정책에 맞추어져 있던 것을 재조정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혁신성, 참여성과 공동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혁신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책효과는 사회책임조달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국의 공공서비스법의 내용과 유사한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고용, 사회통합, 환경 등 구매활동의 사회적 영향으로 고려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입차랑식, 우선구매제도, 사회적 이익 평가,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쉽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런 관점은 지방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나 성북구의 사례가 그에 해당되는데 조례제정과 현장중심 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혁신기획관이라는 직제를 신설하고 사회혁신을 정책방향 가운데 하나로 채택했다.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문제해결을 사회혁신의 과제와 연결시켰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문제해결역량을 강화하고 의사소통모델을 구현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주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이원재, 2017). 지자체 이외에도 공적인 성격이 뚜렷하고 정부출연 비중이 적지 않은 법인체들 역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주체적으로 기여해야 할 주역의 하나다.

(3) 기업과 노조 그리고 공익재단

알터의 분류에 따르면 민간부문 조직은 영리추구 여부를 축으로 6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전통적 비영리부문, 수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부문, 협의의 사회적 기업, 사회적 책임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기업, 전통적 영리부문이다. 이 분류는 사회적 기업이 속하는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양 극단에 위치한 전통적 비영리조직과 전통적 영리부문을 제외한 네 범주를 광의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이 네 부문은 부분적으로나마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 실현의 내용과 폭이 확대되면서 나머지 두 부문, 즉 전통적 비영리부문과 전통적 영리부문의 주체들도 사회적 가치에 무관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전통적 영리부문이라 할 기업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회적 가치의 내용이 협의로 간주

3) 공공기관의 주도적 역할과 관련한 내용은 양동수, "공공부문의 사회적가치 실현의 의미와 과제", 여시재 주최 [한국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묻는다], (2017. 11.14) 발표자료에 의존했다.

될 때는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라 하겠지만 사회 전반의 공공성과 통합성을 다루게 될 때는 동원할 자원이 많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마련이다. 이들 일반 기업의 역할은 사회적 기업이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역할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일차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CSR, 공유가치 창출을 주도하는 CSV가 기업 차원에서 수행하는 주요한 역할일 것이다.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상생경영, 윤리경영, 인권존중문화 등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문화적으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 이미지의 제고에도 도움이 되어 존경받는 기업의 출현은 사회전반의 반기업정서를 약화시키고 그것이 기업활동의 자산으로 되돌아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활동과 연관하여 주목할 것은 사회공헌을 표방한 공익재단의 설립과 이를 통한 사회적 기여다. 공익재단이 반드시 기업의 출현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 개인독지가의 출연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장학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대규모 기금을 확보하고 유의미한 사회적 기여를 지속할 수 있는 공익재단은 많은 경우 기업가 개인 또는 기업의 출현에 의한 것이 많다. 이들 공익재단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 모기업의 사회공헌 및 사회적 책임을 시행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공익재단의 활동은 그 자체가 자율적이고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정책적인 관리의 대상으로 삼거나 일률적인 평가대상으로 삼을 일은 아니다. 다만 공익재단이 여전히 출연기관의 하부기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조직 자체의 위세와 평판을 위한 전시성 사업에 집착할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요한 기여다.

기업부문을 논의하면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주체가 노조다. 전통적으로 노조는 기업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간주되고 순수비영리조직으로서 시민사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오늘날 노조, 특히 거대기업노조는 더 이상 순수한 시민사회조직일 수 없으며 노동자 전반을 아우르는 대표조직으로서의 공적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노조는 안정적 고용, 높은 보수, 이익대변의 조직 등을 보장받은 노동자들의 이익단체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부문과 상생관계에 있기조차 하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의 차가운 반응, 일자리를 둘러싼 노동자 내부의 대립과 갈등은 노동계 내부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노조 역시 기업과 더불어 비정규직, 사회적 약자, 취업난에 고생하는 청년층,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고령은퇴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활동 역시 포괄적으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대원칙을 공유하면서 기업도 노조도 대변해주지 못하는 사회 저변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학교, 종교, 시민단체

사회적 가치의 중요한 요소가 배려와 공감, 그리고 자발성과 참여라 할 때 그 최종적인 주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귀착된다. 이런 가치들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주입할 수도 기업이 판매할 수도 없는 무형의 가치다. 특히 공감능력, 연대와 신뢰의 능력은 장기간에 걸쳐 사람들의 내면에 도덕과 윤리, 품성과 아비투스로 자리잡아야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적 가치 실현은 그러한 가치를 내면화한 인간형, 공존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인 퍼스낼리티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개혁, 시민교육, 참여민주주의와 같은 시민사회 영역의 노력 없이는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학교와 종교의 역할은 매우 크다. 근대로의 이행과정에서 학교는 물질주의 가치관의 확산, 경쟁을 통한 계층상승의 인적자원 계발의 주요한 기제로 기능했다. 한국의 유별난 학벌문화와 학력주의도 생존주의의 절대윤리를 사회화함으로써 각자도생의 심성을 학교에게 내면화해온 결과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함양되고 또래문화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학교를 통한 교육의 기능이 지나치게 수단합리성, 경제합리성, 성취지향성에 맞추어지지 않고 협력과 공생, 배려와 상부상조의 심성을 키울 수 있도록 혁신된다면 학교는 사회적 가치의 창출과 확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종교 역시 근대주의의 세례를 받아 물질주의, 성공주의, 생존주의를 깊이 내면화한 인간형을 주조하는데 기여했다. 세속화 테제와는 달리 한국이 고도성장기에 종교인구의 팽창을 보았던 것도 종교와 성장주의의 친화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종교 역시 학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심성을 주조하고 근원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공공부문과 기업부문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조직적, 물질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곳은 종교다. 이런 종교가 사회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주도하면서 공존지향적인 인간형을 함양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4)]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참여와 소통, 민주주의의 확산을 가능케 하는 주역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한 주체다. 환경단체, 인권단체, 통일운동단체, 여성운동단체, 교육단체 등 시민사회의 조직기반은 일률적이지 않지만 다양하다. 시민단체들이 풀뿌리형으로 지역사회나 특정영역에 깊이 자리잡고 중장기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와는 달리 중앙집중형 조직과 지나치게 광범위한 종합적 대안조직을 지향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시민사회 본래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의 속성을 고려할 때 시민단체는 좀 더 다원적이고 풀뿌리지향적이면서 상호연계되는 네트워크 형식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종교, 시민단체와 같은 조직은 권력이나 자본의 힘은 없지만 도덕적인 규범력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치교육 또는 가치변동을 주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

4) 이 점은 한국사회학회 주최, [사회적 가치] 심포지엄 장에서 사회학자 정수복이 지적한 바에서 크게 도움을 입었다.

에서 특정한 가치요소를 절대화함으로써 개성과 창의, 자율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연한 가치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타주의적인 심성도 미덕이나 윤리로 정형화되고 표준화되어 강조되면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가치영역간의 배열구조를 검토한 라모스에 의하면 공동체적인 가치는 의외로 혁신적 심성과 거리가 멀고 집합주의나 전체주의적 가치와 가깝다. 따라서 이타성, 신뢰, 연대나 배려와 같은 가치의 강조는 언제나 사회구성원의 자율성, 독창성, 혁신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교육을 비롯한 교육과정에서 의식적으로 배려와 협력의 퍼스낼리티를 키워내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고 종교나 사회단체가 그러한 가치를 존중하는 시민윤리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역능적 시민성의 강화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 협력을 일상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혁신이 가능해질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한다. 배려형 인간, 공존형 심성의 출현도 시장중심의 경제적 가치 일원화를 극복하고자 하되 그것이 국가주도의 도덕주의 프로그램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려는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창의적인 개성이 꽃필 수 있는 곳, 그러면서도 이기적인 경쟁논리에 함몰되지 않는 사회적 인프라, 생태계의 창출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5. 사회적 가치 실현의 다차원적 접근

(1) 가치구조의 재구성

사회적 가치는 협의로 사용될 수도 있고 광의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회적 경제 중심으로 논의될 때는 배려, 공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기업 중심으로 초점이 맞추어진다. 반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가치 일반, 사회전반의 혁신을 논의할 때는 정부의 정책부터 대기업의 활동, 교육과 문화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 된다. 어떤 개념이든 그 내용을 한정하면 구체성과 명료함을 얻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포괄성과 유연성에는 한계를 지닌다.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진정한 의미는 가치의 다양성과 상호긴장성이 소멸되어 단일한 가치서열구조, 획일화된 가치배열이 제도화된 것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변경시키는 데 있다. 가치연구에 자주 활용되는 슈와츠 모델은 개인의 행동을 규정하는 중요한 가치를 검증가능한 열 개의 항목으로 유형화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각 가치들은 개인의 생물학적 유기체로서의 욕구, 협력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조건, 그리고 집단의 생존과 복지의 욕구 등 세 차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문화권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10개의 가치요소는 권력, 성취, 쾌락, 자극, 자율, 보편주의, 박애, 전통, 동조 그리고 안전의 가치로 구성된다.

[표 1] 개인의 행동을 규정하는 10가지 가치

동기적 유형	표상하는 객관적 가치	지표
보편주의 (universalism)	자연의 보호와 일반적 타자의 복지를 인정하고 중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중시함
박애 (benevolence)	자주 접하는 사람들의 복지와 안녕을 중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에 우선적으로 관심
안전 (security)	사회 내에서의 안전, 조화, 심리적인 조화와 안정	안전을 중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중요하게 여김
전통 (tradition)	전통문화, 종교, 관습에 대한 존중과 수용	종교와 가족의 요구와 조화로운 생활이 필요
동조 (conformity)	타자를 해치거나 규범을 침해하는 행동을 싫어함	규칙을 준수하고 당위적인 것을 행하는 것이 필요
권력 (power)	타자나 자원들을 지배하고 통제할 지위나 위세 중시	부유해지는 것,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것이 중요
성취 (achievement)	경쟁을 통한 개인적 성공과 업적 성취	개인의 능력을 드러내고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원함
자극 (stimulation)	삶에서의 흥분, 새로움, 도전을 중시	새로운 시도를 즐김, 모험과 위험감수를 수용
쾌락 (hedonism)	스스로의 즐거움, 만족, 감각적 욕구 충족을 중시	좋은 시간을 갖는 것, 즐겁게 사는 것을 중시
자율 (self-direction)	독립적 사고, 창의성과 선택성, 탐구적 자세를 강조	자율적인 결정,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을 중시

슈와츠와 빌스키(1992)는 이 열 개의 가치가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공존할 수도 있지만 상호갈등할 수도 있다고 보고 양립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좀 더 포괄적인 영역으로 재분류했다. 이들에 의하면 양립가능성이 높은 가치들일수록 함께 작동하면 행동화할 가능성이 높고 양립가능성이 낮은 가치가 공존할 경우는 내적인 긴장이 커져 행동화하기 어려워진다. 예컨대 독립적인 결정과 선택을 강조하는 자율의 가치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성공하고자 하는 성취의 가치와 친화력이 높다. 하지만 스스로의 만족과 욕구충족을 중시하는 쾌락의 가치요소는 타인의 행복을 중시하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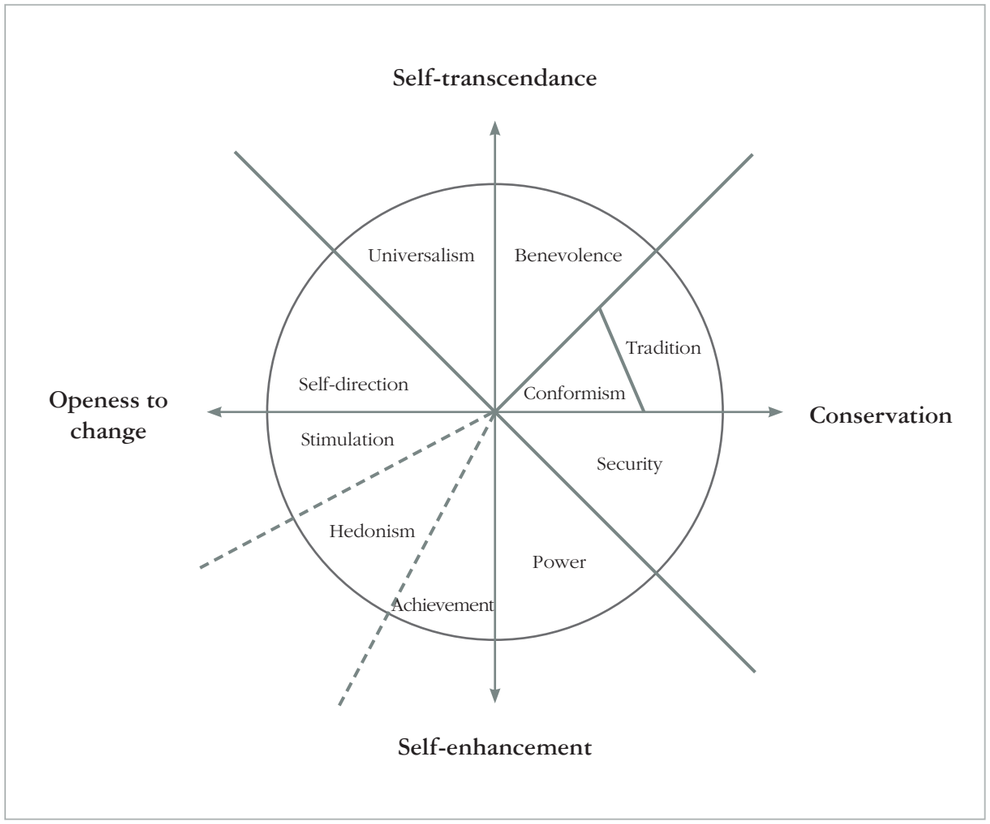

Figure 1: Theoretical model for relations between the ten types of value motivation.

보편주의 가치요소와 친화력을 보이기 어렵다. 이들은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가치들을 두 축으로 2차원 구조 메트릭스를 고안했다. 자기초월-자기강화의 축은 타자를 평등하게 대하고 타자의 복지에도 관심을 갖는지 아니면 개인의 성공과 역량강화를 우선시 하는지를 중심으로 나뉘는 축이다. 변화에의 개방-보수주의 축은 자율성이나 창의성, 도전적인 변화를 중시하는지 아니면 전통적 관습이나 안정성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태도의 축을 의미한다. 이런 두 축으로 재배열하면 이론적으로는 [Figure 1]과 같은 네 가지 가치영역이 분석적으로 나뉘어진다. 물론 가치영역을 나누는 경계선은 수학의 4 사분면을 나누는 축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와 문화에 따라 그 경계선이 다르게 그어진다.

이런 틀에 기초하여 유럽의 경제성장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연구한 라모스에 의하면 독일과 폴란드는 꼭같이 자기초월의 가치와 보수주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하지만 양자 사이의 거리, 긴장의 수준, 서열화의 방식에서 두 국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독일은 자기초월의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 사회적 가치란 이처럼 요소가치들의 배열구조, 상대적 비중에서 나타나는 종합적 형태와 깊은 연관이 있다. 시장주의 가치지향은 대체로 자기강화와 변화개방성과 친화력을 지닌다. 즉 자기결정, 선택과 업적, 권력과 추진력, 자극의 수용 등이 오늘날 시장경쟁에서 진취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행동양식의 지향성을 잘 반영한다. 반면 사회적 가치가 중시하는 연대, 책임, 관용, 포용 등의 가치는 주로 자기초월과 보수주의의 두 축 사이에 있다. 이에 따르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구분은 자기강화-변화개방의 지향성과 자기초월-보수주의의 지향성 사이의 구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유럽의 선진국일수록 자기초월-개방성의 가치구조가 강하게 나타나고 개인의 즉각적 이익이나 단기적 효율성, 편법주의 같은 가치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며 공유가능한 가치가 중시된다는 조사는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가치는 여러 가치항목들이 배열되고 구조화되는 방식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다. 한국사회의 행동양식을 논의한 한 사회학자는 1987년 이후의 주된 가치를 민주화와 자유화의 두 축으로 보고 이 둘의 공존양식이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은 그 내면에서 민주적 감성과 신자유주의적 감성의 모순적 공존을 경험하고 사회정책에 대한 반응에서도 이 두 축 사이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김종엽, 2017: 183-186). 슈와츠의 표현을 빌어 말한다면 자기초월의 가치와 이기적 가치가 독특하게 공존하면서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공정성에 대한 신뢰저하, 집단적 불만과 좌절감의 확산, 헬조선 류의 청년층 반응 등은 이런 가치배열이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조응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개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배열과 기업이나 조직이 강조하는 가치배열이 불일치하고 그로 인한 아노미, 스트레스가 심리적 좌절감과 행동의 불일치를 강화시킨다. 조직 차원에서 본다면 경제적 성과와 재무적 가치만을 강조하고 그것에 입각한 선발, 평가, 양성이 이루어짐으로써 가치의 동질화가 심화되고 혁신의 가능성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논의는 단순히 이타주의, 협조, 배려, 선행과 같은 가치요소를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가치요소들과 어떻게 구조화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 전망, 가치의 메트릭스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과제라 하겠다.

(2) 협력의 제도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은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여 추구되는 공통의 과제다. 추구하는 가치의 종류도 다양하다. 따라서 유연하면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가능케 하는 협력의 제도화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의 제도화는 행위자의 자율성에 기초하면서도 일정한 공적 개입과 지원체계를 결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책임의 제도화를 이루는 방식으로는 참여주도형, 정책개입형, 사회공헌형 모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여주도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처럼 스

스로의 참여를 통해 협력의 가치를 확인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소규모 주체들이지만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참여와 존재감, 역능성의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델이다. 둘째로 정책개입형은 정부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협력을 제도화하고 이를 견인하는 방식이다. 공공구매를 매개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입법기능과 재정지출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식으로서 행정력의 도움을 받은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중시하는 모델이다. 셋째로 사회공헌형은 대기업과 같이 동원할 자원이 많고 사회를 주도하는 주체들이 사회공헌과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활동이다. 이것은 협력의 가치에 새로운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확산에 기여한다. 여러 공공법인체가 수행하는 공익활동 역시 이런 모델에 포함시켜 이해할 수 있다.

이 세 모델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약점을 갖는다. 자발적인 참여와 밑으로부터의 가치실현 모델은 자긍심과 참여, 상호신뢰의 창출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규모가 작고 파급력이 제한되며 동원가능한 자원이 부족한 단점도 적지 않다. 공공재정의 효과에 의존하는 정책개입형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규모가 작은 자발적 주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개입과 재정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자율적인 협력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데는 부정적일 수 있다. 사회공헌형 모델 역시 동원할 자원이 큰 대기업과 공공법인이 주체가 되는만큼 영향력이 크고 가시적인 결과를 얻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대기업 중심의 시혜적인 프로그램이 되거나 대기업에의 의존도를 심화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이 세 모델은 각각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자율협력과 지원체계의 지혜로운 균형이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위로부터의 개입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의 슈와츠 모델에서 보듯 연대와 배려, 공생 등의 가치요소는 변화와 혁신에의 개방성과는 거리가 있고 오히려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적 태도와 친화력이 있다. 다시 말해 배려와 협력을 강조하는 노력은 자칫 전통주의, 권위주의, 국가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자율성, 혁신성, 비판성, 개별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지출과 정책개입에 의존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모델이 강조되면 될수록 이것이 사회 전체 차원에서 집합주의, 권위주의, 국가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재정효과의 개입은 상호신뢰와 자발적 협력에 의존하는 협동조합, 지역복지,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미시적 인프라 구축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정 자체가 자발적 협력, 소통형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자체, 공공기관, 중앙정부 모두가 호혜적인 정신으로 협치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시장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노조도 이러한 자발적 협력의 구도에 참여해야 한다. 종교나 학교, 사회단체와 공공기관들 역시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력과 공유의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한다.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구상, 자원배분의 의지를 강화하면서도 그것이 지자체, 공공단체, 기업, 사회단체, 소규모 집단 등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창의성, 참여성, 혁신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기획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요소를 재발굴하여 갱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연고주의의 폐해를 벗어나면서도 상호배려와 협조가 집약되었던 두레정신이나 공공성의 자산을 시대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가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갖고 자기 정체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도록 문화영역에서의 노력이 절실하다. '오래된 미래' 라는 말이 표상하듯 과거의 바람직한 요소가 미래의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그 실천을 위해 애쓸 필요가 있다.

(3) 혁신의 제도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혁신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혁신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 발전의 잠재력이 되는지는 굳이 설명이 불필요할 정도다. 현대사회는 근대사회의 전형적인 모습, 즉 정해진 조직과 활동공간, 표준화된 경력과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상호관계로부터 크게 벗어나고 있다. 유동성이 고도화하고 시공간을 넘나드는 초연결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사회적 삶은 행위자 개인의 속성을 넘어서 네크워크의 장, 상호연계되는 생태계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다수의 구성원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가 되고 혁신의 시너지가 억압되지 않도록 연결재의 공간이 유연한 사회적 공간, 공적 자원이 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기술환경에 익숙한 새로운 젊은 세대가 생태계 내의 다양한 진화적 실험을 가능케 하는 자원이자, 궁극적인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혁신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혁신을 개인적 능력이나 천재적 발상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네트워크 사회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 인간의 소통/교환 관계가 점점 더 자기 조직적인 복잡계의 성격을 갖게 되면 될수록 이러한 체계에서 가치의 실현은 전략적 발전이나 사회공학적 조절보다는 생태계적 자기조절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개인의 인적자본 개발에 집중되고 있는 자원배분과 관심을 혁신생태계의 구축에 좀 더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네트워크 환경이 이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비즈니스, 가치실현, 참여방식, 생활패턴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의 기술환경이 개성과 자율, 그리고 협력과 책임을 독특하게 연결시키고 병행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잠재력은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현실적으로 네트워크 체계는 한편으로 구성원의 자율성과 개성을 발현하도록 도와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쏠림의 체계, 혹은 멱함수의 법칙이 지배함으로써 불평등과 상호단절을 심화시킬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다 동일한 가치요소를 공유할 수도 없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 서로 길항하고 갈등하는 가치요소들이 융합과 조율을 거쳐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문화인프라가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4차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새로운 기술정보환경 속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창조적 실험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간, 공유의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

가 생산하는 재화가 갈수록 연결재의 성격을 가지며,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갖게 되고 내가 소비하는 연결재의 가치는 나와 연결된 타인들이 함께 소비할수록 증대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관심사에 집중하는 것 만으로도 유의미한 사회적 협력, 공공의 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책임의 제도화

사회적 가치를 협의의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광의의 차원에까지 확장하려면 책임의 제도화를 위한 실천을 중시해야 한다. 책임이란 공동체 차원에서 부여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행위자의 내면에서 자각되고 확인되는 자의식이자 동기이기도 하다. 책임은 개인의 역능성과 자발성을 사회 공동체의 필요와 연결시켜줌으로써 권리와 의무의 행복한 결합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21세기의 상황에 걸맞는 책임윤리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내적 동기로 수용하는 인간형을 키우는 교육개혁이다. 청년과 자녀들이 경제적 이익이나 물질적 평안을 최고 가치로 간주하고 결과중심의 편법도 수용하는 퍼스낼리티를 공유할 때 한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와 같은 성장지상주의, 출세지상주의, 서열화와 차별의식으로 인해 상처받거나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교육체제로서는 책임을 동반한 윤리적 심성의 배양을 기대하기 어렵다. 건강한 주인의식, 주체로서의 자신감, 물질적인 보상과는 별개로 추구할 수 있는 가치의 내면화가 동반될 때 비로소 시민의식과 역능성, 또 그에 기초한 책임의식이 자라날 수 있다. 배려나 공유, 협력과 연대라는 가치에 대한 '공감적 심성' 도 이러한 자존감의 기초 위에서 제대로 자라날 수 있다. 따라서 생존주의적으로 구성되어온 '마음체제' 를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여 권리와 의무에 대한 독자적 윤리, 내면의 책임의식이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및 교육방식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특히 행정에 있어서의 공공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본질적으로 책임을 이양받은 기구이고 따라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정책구상과 집행을 본연의 임무로 한다. 하지만 국가의 영향력이 강한 현대사회에서 권위주의와 행정주의가 일상생활세계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신뢰, 협력, 연대, 참여와 배려의 원칙 등은 강제되거나 표준화될 때는 그 효과도 반감되고 본래적 성격도 왜곡되기 쉽다. 공공부문은 공적인 책임성을 강화하되 미시적인 생활세계 곳곳에서 자발적인 참여, 권리와 의무의 결합, 책임있는 실천이 실험될 수 있도록 유연성과 협력성을 강화해야 한다. 유의미한 실천여부를 평가하는 기준도 획기적으로 바꾸어 양적인 성과측정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의 전형적 행위방식, 아비투스의 구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평가의 공정성, 혁신성, 창의성을 갖추기 위해 애써야 한다. 배려와 신뢰, 공동체적 관심과 이타적 심성을 뒷받침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행정편의주의나 단기적 정량평가로 환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량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단기적 성과와 중장기적 영향력을 어떻게 나눌지, 유의미한 실패를 인정해줄 방식은 무엇일지 질높은 기획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결국 사회적 가치는 상충되어 보이는 여러 가치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역동적 효과를 가져오는 복잡적응시스템(complex adaptive system)의 창출이다. 그것은 개별적인 가치요소들로 환원될 수 없는 여러 가치들의 상호배열, 모순적 결합과 창의적 융합이 가능한 복합기제의 창출작업으로서 근대화가 만들어놓은 가치구조를 혁신하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사회적 가치의 다차원적 구성: 핵심요소, 실행영역, 수행주체, 실천전략

핵심요소	안전과 일자리	빈곤퇴치, 일자리 창출, 소수자 배려, 양극화 완화, 고용안정
	혁신과 역능성	역능성, 자율, 도전, 창의, 개성들의 네트워크, 혁신적 심성
	공동체와 공공성	신뢰, 협력, 공유, 사회적 자본, 소통, 참여, 공공성
	상생과 지속가능성	사회적 포용, 배려, 환경정의, 지속가능한 발전, 선행과 자선
실행영역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활성화, 지역중심 참여와 협업 확대
	공공구매와 공적 서비스	공공구매, 공공가치를 고려한 예산집행, 최소지출이 아닌 최적지출
	사회책임과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 창출, 사회공헌, 공익재단
	사회혁신과 시민적 역능성	혁신적 플랫폼, 이질성의 융합, 혁신선도자의 양성, 연결재의 사회화
수행주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생산자 조합,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주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부의 각 부처, 지자체, 유관부처기관, 공공기관

수행주체	기업, 노조, 공익재단	기업, 노조, 공익재단, 사회공헌조직, 복지법인, 공익성을 띤 문화기구
	학교, 종교, 시민단체	학교, 종교, 비영리적 시민단체, 환경단체, 인권단체, 학술조직, 문화단체
실천과제	가치구조의 재구성	가치구조의 전환을 위한 교육, 문화, 평가 시스템의 개혁
	협력의 제도화	사회적 경제, 사회공헌, 사회적 책임을 위한 민간, 정부, 기업의 협력
	혁신의 제도화	데이터의 사회화, 혁신적 플랫폼, 네트워크의 사회자본화
	책임의 제도화	학교, 종교, 시민단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지향 프로그램 공유

■ 참고문헌

고동현 · 이재열 · 문명선 · 한솔, 2016.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서울: 한울아카데미 1944.

김종엽. 2017. [분단체제와 87년체제]. 창비.

김의영 외. 2016. 사회적 경제의 혼종성과 다양성.

박명규. 2016. 한국적 역동성의 현대적 기원. [키워드로 보는 한국현대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송위진. 2014.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활동 특성과 시사점. 동향과 이슈 14: 1-22.

이승규 · 라준영. 2010. 사회적 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 사회투자수익률. 벤처경영연구 13(3): 41-56.

이원재. 2017. 서울시 '의사소통형' 정책거버넌스와 사회적 가치: '원전하나줄이기' 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임혁백. 2015. 한국의 정치와 사회의 공공성. 광복 70년 선진사회의 기반 심포지엄 발제문.

장용석 · 김회성 · 황정윤 · 유미현, 2015. [사회적 혁신 생태계], CS 컨설팅 & 미디어.

장원봉. 2007. 사회적 경제와 한국시민사회의 과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대안적 개념화. 시민사회와 NGO 5(2)

정재관. 2015. CSR 논의의 전개 과정. 서재혁 · 장용석 · 정재관(공편).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 서울: EAI 출판부.

정한울. 2015. 반기업정서의 결정 요인: 정치가 기업 이미지 좌우. 서재혁 · 장용석 · 정재관(공편).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 서울: EAI 출판부.

Boeger, Nina. 2017. Reappraising the UK Social Value Legislation. *Public Money & Management* 37(2): 113-120.

Ingel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orter, Michael E. & Kramer, Mark R. 2011. Creating Shared Value: How to Reinvent Capitalism and Unleash a Wave of Innovation and Growth. *Harvard Business Review* Jan-Feb.

Ramos, Alice, 2006. Social Values Dynamics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Portuguese Journal of Social Science* 5(1): 35-64.

Schwartz. Shalom H.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1-65.

Social Innovation Monitor

CSES
사회적가치연구원
135-91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역삼동 678-39)
전화 02-557-5682　팩스 02-554-3511

제호: Social Innovation Monitor
발행인/편집인: 사회적가치연구원 서재혁
인쇄인: 북커뮤니케이션(02-2274-0676)
발행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8-39
발행일: 2018년 3월